



주간 통일정세

2012-2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은 찬양 새 노래 대대적 보급(7/2, 연합뉴스)

- 북한이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노래인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를 만들어 대대적인 보급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노래 제목은 김 1위원장이 지난 4월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 연설에서 가장 마지막에 내뱉진 구호이며 총 3절로 이루어 졌고, 1절에서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군민일치'를 내세우고 2절에서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인 '선군정치'를, 3절에서는 김 1위원장을 상징하는 '새세기 산업혁명'을 강조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새 노래의 악보가 1면에 실린 지난달 26일부터 2일 현재 까지 이 노래를 하루에 몇 차례씩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음.

● 北김정은 동정 보도, 김정일 생전기록 상회(7/2, NHK)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국영 매체의 동정 보도 건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 기록을 상회했다고 NHK방송이 2일 보도함.
- 올해 상반기 북한의 국영 매체가 보도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정은 81건으로, 부친인 김 국방위원장의 생존 당시 상반기 최대 기록인 78건보다 많았으며 관련 보도는 군부대 시찰 등 군과 관련된 것이 약 절반을 차지했는데 이는 김 국방위원장의 선군(先軍·군사우선) 정치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줌.
- 국영매체에 보도된 김정은의 각종 시찰 가운데 75%는 후견인 역할을 맡고 있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함.

● 김정은, 평양양말공장·아동백화점 현지지도(종합)(7/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의 양말공장과 아동백화점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이번 현지지도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박봉주 당 경공업 부장, 리재일 당 선전부 1부부장, 량청송 등이 수행함.
- 김 1위원장은 평양양말공장을 찾아 기술장비와 생산실태를 점검한 뒤 "더 많은 양말을 생산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당정책 집행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자세"라며 문제가 있을 땐 자신에게 정확히 보고해야 문



제를 제때 풀 수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은 김 1위원장이 이동백화점에 "아동차, 미끄럼다리, 버섯집, 기차 굴간놀이, 동물모형 흔들이차, 야자섬놀이 등 28종 2천296점의 실내놀이 터용 기재들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셨다"고 소개함.

● **北, 플랫폼 구두로 현대적 이미지 노려(7/3, ABC방송)**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과 북한에 대한 현대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성에게 앞뒤로 굽이 있는 '플랫폼 슈즈', 귀걸이 착용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미국 ABC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함.
- 스위스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김정은은 북한 주민의 일상 생활에서 좀 더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바지 착용이라고 방송은 소개함.

● **7·4남북성명 40주년...北 "수령님 업적"(7/4, 노동신문; 평양방송)**

- 북한 매체들은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은 4일 7·4성명은 한반도 통일의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김일성 주석의 업적이라고 선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조선전체 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글에서 "7·4공동성명의 발표는 분열과 대결의 동토대를 화해와 단합의 열풍으로 녹여낸 민족사의 첫 쾌거"라고 평가함.
- 그러면서 "북과 남이 처음으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에 합의한 이 역사적 사변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규정함.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도 이날 7·4성명에 대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불면불휴의 노고의 빛나는 결실" "김일성 동지께서만이 이룩하실 수 있는 불멸의 업적" 등의 표현을 쓰가며 김 주석을 부각함.

● **김정은, 평양항공역 개건사업 현지지도(7/5,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항공역사업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가 5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9월 평양항공역을 현대적으로 개건하는 공사를 시작했고 불과 6개월여 만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을 앞두고 1항공역사를 준공했다고 전했으며 평양항공역은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평양 순안공항 청사를 일컬음.
- 김 1위원장은 1항공역사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고 군인건설자들이 짧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건설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판문점서 김일성 추모행사 개최(7/6, 연합뉴스)**

 -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18주기를 맞아 북측 인사들이 6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 있는 '김일성 주석 친필비'에서 추모행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인사 60여명이 이날 오전 친필비 앞에서 헌화, 참배했다"고 확인했으며 이날 추모행사에는 김령성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은, 신규 창단 모란봉악단 시범공연 관람(7/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창단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북한 매체들이 7일 보도함.
 -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올해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모란봉악단을 친히 조직해주었다"며 "조직된 지 불과 몇 개월 안된 모란봉악단이 자기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하는 뜻깊은 시범공연의 막을 올렸다"고 전함.
 - 공연관람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기남 당 선전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양건·김영일·김평해 당 비서, 최부일·김명국 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조정철 보위사령관 등이 함께함.

- **김일성 18주기...北 "영원한 수령" 추모(7/8, 연합뉴스)**

 -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지도부는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고, 북한 매체는 김 주석을 '영원한 수령' '민족의 태양' '절세의 애국자' 등으로 찬양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김 1위원장은 이날 0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정각 인민무력부장 등 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함.
 - 이와 별도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간부들과 근로단체 관계자들도 금수산태양궁전을 다녀감.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애국업적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위대한 김일성 동지이시야말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애국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라고 찬양함.
 -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군대와 인민, 수많은 외국인이 김 주석의 동상이 세워진 평양 만수대언덕을 찾고 있다며 "김일성 동지는 세계가 공인하는 20세기 자주시대의 향도자"라고 주장함.

- **김정은 옆 '세련된 여성'은 누구(종합)(7/8,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TV는 8일 저녁 김 1위원장이 이날 새벽 김일성 주석의 18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장면을 담은 5분가량의 기록



영화를 내보냈는데 김 1위원장의 가까이서 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눈에 띄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해당 여성은 단발머리에 검은색 투피스 정장 차림으로 김 1위원장이 김 주석의 훈장보존실과 김 주석이 생전에 이용한 열차 등을 둘러볼 때 김 1위원장 바로 옆에 서거나 약간 뒤에서 수행함.
- 특히 김 1위원장과 이 여성은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태양상(영정)' 앞에서 나란히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을 때 다른 군 고위간부들은 모두 거수경례를 하고 있었음.

■ 김정은동향

- 7/3, 김정은 제1위원장, 평양양말공장과 아동백화점 현지지도(7.3, 중통)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박봉주(黨부장), 리재일(黨제1부부장), 량청송(黨부부장) 동행
- 7/8, 김정은 제1위원장, 7.8 0시 軍지휘성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김父子 입상에 경의 표시(7.8, 중통·중·평방)
 - 최룡해, 리영호, 김정각, 현철해, 최부일, 손철주, 박재경, 조경철, 김영철, 리병철을 비롯한 軍 지위성원들
- 7/9, 김정은 제1위원장, 7.8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1974년 건립) 시찰(7.9, 중통)
 - 동행인 未언급, 기념관 개건보수공사를 인민군대에 일임.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내각총리, 7.2 만경대·대성산유회장 개건정형 및 남포그릇분공장 현지요해(7.2, 중통)
- 노수희(「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7.2 창전거리 평양창전소학교과 살림집, 경상탁아소·경상유치원 참관(7.2, 중통)
- 평양시혁명사적지보존사업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7.2 리일환(평양시당 비서) 등 참가下 진행(7.3, 중방)

나. 경제

● 북한경제 3년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7/8, 연합뉴스)

- 북한경제가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8일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은행은 8일 '2011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자료를 통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보다 0.8% 늘었다고 밝힘.
- 광업 성장률은 비금속광물이 1.7% 감소했으나 석탄생산이 2.0% 늘어나 전체로는 0.9%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3.0%이며 이 가운데 경공업은 -0.1%, 중화학공업은 -4.2%였고 전기·가스·수도업은 수력발전이



늘긴 했으나 화력발전이 큰 폭으로 줄어 4.7% 감소함.

다. 군사

● 北 "평화적 우주개발 계속 추진"(7/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일 "평화적인 우주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북핵담당 대사가 지난달 29일부터 7월2일까지 북한을 방문한 것을 소개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은 부단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함.
- 대변인은 또 2·29 북미합의와 관련해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걸고 식량협조 약속까지 저버리는 것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또 하나의 표현"이라며 "우리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는 그러한 식량은 받아먹지도 않는다"고 강조함.

라. 사회·문화

● 탈북여성들, 한국 TV의 새 스타로 부상(7/2, 리베라시옹)

- 프랑스의 진보 성향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1일(현지시간) 탈북 여성들이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새로운 스타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함.
- 보도에 따르면, 종편TV 채널A에서 방영되고 있는 주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탈북여성 13명이 출연함.
- 채널A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치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출연자들이 북한에서 겪은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들만 언급됨.

● 北조선중앙통신 사장 방러...미디어서밋 참가(7/3, 조선중앙통신)

- 김병호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대표단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미디어정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3일 평양을 떠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미디어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 회의는 러시아 뉴스통신사인 이타르타스 주최로 4~7일 열리며 '전 세계 미디어의 21세기 도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는 '전자 미디어 정보 패턴의 다양화인가? 글로벌 정보독점인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대중조작 수단인가? 사회통합 수단인가?' 등을 주제로 다양한 그룹토의와 세계 언론사 대표들의 정상회의 등이 열릴 예정임.

● 北주민 6월 식량배급 감소...권장량의 63%(7/4, 미국의소리(VOA))

- 북한 당국이 지난달 북한 주민에게 1인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이 4일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



을 인용해 보도함.

- 북한 당국의 주민 1인당 하루 배급량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95g을 유지하다가 4월에 400g으로 약간 늘었지만 5월 395g, 6월 380g으로 최근 두달간 계속 줄었고 6월 배급량 380g은 WFP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63%에 불과함.

● **北, 런던올림픽에 11개 종목 51명 출전(7/4, 조선중앙통신)**

- 이달 27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30회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가 11개 종목, 51명으로 확정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 통신은 "최근 여자권투와 남자다이빙에서 각각 1명이 추가돼 총 51명이 참가자격을 획득했다"며 "종목은 여자축구와 마라톤, 탁구, 유도, 레슬링, 역도, 사격, 양궁 등 11개"라고 밝힘.

2. 대외정세

가. 일반

● **5월 北中교역 7억 달러...사상 최대(7/6, 미국의 소리(VOA))**

- 북한과 중국 간의 지난 5월 교역액이 7억 달러로 월 교역액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6일 보도함.
- 중국 상무부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 늘었으며 중국의 대북 수출액 역시 4억3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37% 증가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변인, 7.2 러시아 북핵담당 대사(그레고리 로그비노프)의 訪北(6.29~7.2) 관련 '지역정세와 6자회담 재개 등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교환 진행' 언급 기자회견(7.2, 중통)
 - 2.29 북미합의 관련,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는 식량은 받아 먹지 않을 것이며, 우리식의 경제발전전략과 평화적 우주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임.
 - 미국의 對北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 핵억제력은 부단히 강화될 것임.
- 최근 일본 국회의 '개정된 우주기구법' 가결 및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통과 관련 '일본이 군사대국화, 핵무장화의 길로 줄달음치고 있다'고 우려(7.3, 평방·노동신문/일본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 6자회담(북핵)

● 北 "김정일 핵무기 제조 지시설은 날조"(7/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우리늄형 원자폭탄 개발을 지시했다는 최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부인함.
-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의 도쿄신문과 마이니치신문 2일부가 우리의 핵무기개발계획에 대한 그 무슨 '문건'을 입수했다느니 '고농축우리늄'으로 핵폭탄을 만들데 대한 지시가 있었다느니 '정치적 유훈'이라느니 뭐니 하는 허황한 보도를 내돌렸다"고 주장함.
- 통신은 "이것(우리늄 핵폭탄 지시 보도)은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날조품으로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압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정치적 모략극"이라며 "여기에는 일본의 핵무장화, 군사대국화 책동을 합법화하며 그에 대한 주변나라들의 경계심과 반발을 녹잡하려는(누그러뜨리려는) 어리석은 기도가 내포돼 있다"고 비난함.
- 통신은 특히 "일본당국이 '고농축우리늄'에 의한 핵무기 제조는 '정치적 유훈'이라느니 뭐니 하며 그것을 국제사회에 납득시키기 위해 언론 매문 지들까지 내세워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거든 것은 그 무엇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3. 대남정세

● 北 '우리민족끼리TV' 웹사이트 개설(7/4,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우리민족끼리TV' 웹사이트를 새로 만든 것으로 4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전날까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있던 각종 동영상들이 새로 개설된 우리민족끼리TV(<http://www.uriminzokkiri.co>) 웹사이트로 모두 옮겨짐.

● 北 "남측 노수희 탄압 용납 않겠다"(7/4,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4일 무단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체포방침을 '파쇼적 탄압 기도'라고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비난함.
- 이날 '탄압의 대상이 될수 없는 의로운 장거리'는 글에서 "노수희 부의장의 평양 방문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고 정의로운 애국적 장거리로서 결코 문제시되거나 파쇼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노 부의장에 대한 보수당국의 날로 노골화되는 파쇼적 탄압 기도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또 한차례의 악랄한 부정이며 자주통일 시대를 지향하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라며 "반통일 폭압책동에 더욱 매달리고 있는 보수당국의 처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방북 南범민련 노수희, 김영남 만나(7/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 통신은 김 위원장과 노씨가 "동포애의 정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담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담화에는 최진수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북측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함.

● **무단방북 노수희 귀환..공안당국 연행(종합2보)(7/5, 연합뉴스)**

- 무단 방북했던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북한 체류 104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씨는 이날 오후 3시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옴.
-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대기하던 통일부 연락관이 노씨의 신병을 인수했으며, 신원확인 등 간단한 입경 절차를 거쳐 곧바로 공안당국 관계자들에게 인계했고 공안당국은 노씨를 긴급체포해 연행했으며, 판문점 인근 군부대 시설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노씨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짐.

■ **기타 (대남)**

- 北 「조국전선」, '7.4공동성명' 발표 40년 관련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선언들 고수 관철,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 △민족자주 통일, △反정부 투쟁' 선동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7.4, 중통·중방·평방)
- 7.4공동성명발표 40돌 기념 南·北·해외 공동토론회, 7.4 서울·평양·도쿄에서 모사전송 방법으로 진행(7.4, 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국방부장, 北 핵실험·도발 용납 안돼"(7/2)

-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장관)이 최근 우리 예비역장성 단체 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과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성우회 관계자가 2일 전했다. 량 부장은 지난달 19일 중국을 방문한 고명승 성우회 회장과 이규형 주중대사 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 량 부장은 또 "북한 김정은이 의외로 경제에 몰두하고 측근들은 외교개방, 경제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보다는 김정은이 중국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성우회는 덧붙였다.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의 고명승 회장 일행은 마샤오텐(馬曉天) 중국 국제전략학회 회장 초청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을 방문했음.

나. 중·북 관계

● 北 진출 중국기업들, 이익보호 행보(7/7)

- 북한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이 지난 4월 평양에서 '조선중국상회'를 결성하는 등 북한내 기업의 이익 대변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했다. RFA는 조선중국상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용해 중국기업 연합회인 이 조직이 출범 1개월 후인 5월 17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1차 보고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30여 개의 회원사가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영사보호 문제 등을 설명했고 북중 교역과 관련한 통계 자료도 제공했음.
- RFA는 조선중국상회의 첫 보고회에 대해 "북한과 교역하거나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이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권익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조선중국상회는 북한에 직접 투자했거나 북한과 교역 중인 중국 기업들의 연합체로 지난 4월27일 류홍차이(劉洪才) 주북 중국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결성됐으며 무역, 광산업, 서비스업, 자동차 및 자전거 생산 등에 종사하는 중국 기업 50여 개가 회원사로 가입했음. 조선중국상회는 회원사의 권익 옹호와 북중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었음.



다. 러·북 관계

● "北-러, 국경조약 체결"〈러 소식통〉(7/5)

- 북한과 러시아가 5일 국경조약을 체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의 한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가 5일 모스크바에서 국경조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의 상호교류 강화, 변방지역을 비롯한 양국 간 경제교류 발달에 우호적인 조건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7공군사령관 "한미 공군력 숫자보다 통합우선"(7/5)

- 잔 마크 주아스 미 7공군사령관(중장)은 5일 한국과 미국 공군은 전력의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항공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아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공군본부와 세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15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군 현대화보다는 재래식 무기체계를 활용하는 태평양 지역 일부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맞춤형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그 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 좋은 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이제껏 누려온 안보 수준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응책 등 새로운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아스 사령관은 "군의 군사력 증강 요구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부족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과제"라면서 "양국 공군은 전력의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통해 예산과다 지출과 중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양국 공군이 전투기 등 항공기의 숫자를 막무가내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을 통합해 전투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그는 "한 때 미군은 U-2 고공전략정찰기를 대체하려고 SR-71 정찰기를 개발했으나 과도한 운용유지비용으로 SR-71 사업을 취소했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예산을 균형적이고 빈틈없이 사용해 동북아 전구(戰區)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의 김종하 원장은 '전투기 획득 및 운영 전략'이란 발표문을 통해 차기전투기(F-X) 기종 선정 평가에서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는지를 우선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한국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절반 이상이 노후화됐으며 2020년 이전 대부분 도태될 예정"이라면서 "전투기 대수 감소가 한미 연합작전 수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F-X와 같은 신형 전투기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종탁 연구위원은 '숙련급 조종사 효율적 관리 방안'이란 발표문을 통해 "숙련된 조종사의 연간 수요는 250명인데 매년 양성되는 공군 조종사는 160명으로, 90명가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군에 '숙련급 조종사 관리대책TF'를 구성해 대령 진급률 향상, 조종군무원 직위 확대, 서울지역 조종사 자녀 교육용 관사 신축, 조종장교 전문화 인사관리제도 시행, 조종사 조직문화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미7공군사령관, "평택시와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7/8)

- 미7공군사령관 잔-마크 조아스(Jan-marc Jouas) 중장은 8일 최근 물의를 빚은 미군 헌병의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과 관련, "평택시와 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아스 중장은 이날 오후 2시 평택시 신장동 k-55(오산 에어베이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난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주한미군의 영외순찰 권한 등에 대해서는 "미군과 그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에서 순찰이 가능하지만 영외순찰 과정 전반에 걸쳐 소과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한국 이외 지역에서 미군의 영외순찰 권한과 절차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동영상에서 미헌병이 과도하게 시민을 제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 출동한 평택서 경찰에 시민 인계를 거부한 이유 등에 대해서도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미 헌병들은 지난 5일 오후 8시경 평택 k-55 인근 로데오거리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와 관련, 시민 양모(35)씨 등 3명에게 수갑을 채워 물의를 빚었다.

나. 한·중 관계

● 한-중, 재난구호협력 MOU 체결 협의(7/2)

- 한국과 중국은 2일부터 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8차 한·중 군수협력회의를 열고 '재난구호 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방안을 협의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방부 이상욱 군수관리관과 중국군 총후군부 부참모장(육군소장)이 공동 주관함. 국방부는 "작년 7월 양국 국방장관이 체결하기로 합의한 재난구호 교류협력 양해각서 등 군수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재난구호 교류협력 양해각서는 상호군수지원협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 이 양해각서에는 재난구호 등 협력 범위와 국외에서 인도적 재난구호 협력을 비롯한 재난구호 복구 훈련, 재난복구시설 상호 방문 등이 명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군 총후군부는 군수, 보급, 후생 분야를 책임진 조직으로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장비부와 함께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4대 기구의 하나임. 한편 한국은 러시아와는 아직 상호군수지원협정 체



결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 한·중 FTA 2차 협상서 민감품목 범위 논의(7/3)

- 정부는 3일 제주도에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을 함.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측 협상단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함. 중국측 수석 대표는 위지엔화(俞建華) 상무부 부장조리(部長助理:차관보급)임.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FTA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관세를 부분적으로 감축할 민감품목의 범위를 논의할 계획임. 양국은 교역량과 금액 등을 고려해 민감품목의 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EU와 FTA 체결 때 3년 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일부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설정했음. 쌀 등 일부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음. 정부 관계자는 "한·EU FTA보다는 개방 범위가 다소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음. 한국은 농수산 분야와 일부 취약 중소기업업종을, 중국은 자동차, 기계, 석유 등 제조업을 민감 분야로 간주하고 있음.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협상위원회(TNC) 산하 협상 작업반을 설치할 예정임.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도 논의함.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2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서 같은달 14일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벌였음.

● 한·대만 투자보장협정 협상 착수(7/5)

- 우리나라와 대만이 투자보장협정(BI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음. 정부는 지난달 대만에서 BIT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마쳤다고 5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가 밝혔음. 2차 협상은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임. 정부는 최근 대만과의 교역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BIT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한국은 대만의 5위 무역상대국이고 대만은 한국의 9대 무역 파트너임. 우리나라와 대만은 지난 1992년 단교했지만 1년 후인 1993년부터 대표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음.

● 中외교부 "대륙붕 문제 담판으로 풀자"(7/6)

- 한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 추진에 대해 중국이 담판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동중국해) 분쟁을 당사국과 담판을 통해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음. 류 대변인은 한국의 대륙붕 연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음. 류 대변인은 이어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일관, 명확하다"며 "한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류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한국이 확보하려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과 중첩되므로 한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완곡한 어법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됨.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



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아만 걸프'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주장하는 경계가 서로 겹쳐 있음. 앞서 5일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한국이 일본의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연장은 안된다"고 반발했음.

● <동중국해 대륙붕 논란속 한중 협력가능성 주목>(7/7)

- '아시아의 페르시아만 걸프'로 불리는 오키나와 해구 인근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 문제를 놓고 한·중·일 3국이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한·중간 전략적 협력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음.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3국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과 중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국의 공식 입장을 담은 정식 문서를 제출하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물밑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임.
- 이런 관측은 오키나와 해구를 바라보는 양국의 입장이 같다는 점에 기초해 있음. 한중 양국은 2009년 5월 12일 같은 날 CLCS에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에서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나와 해구까지의 대륙붕은 일본의 권리가 없다는 것에 한·중 양국이 공통의 인식을 보인 셈임. CLCS 논의 구조도 한중 협력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임. 특정 국가로부터 대륙붕이 연장됐는지 등에 대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심사하는 위원회인 CLCS는 특정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음. 이 경우 국가간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데 한중 양국 입장에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양국간 이견 및 3국간 경계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됨. "중국은 (동중국해) 분쟁을 당사국과 담판을 통해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이 6일 발언한 것도 이런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이와 관련, 외교기에는 한중간 외교채널을 통해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를 놓고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들림. 나아가 중국이 우리 정부와 CLCS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부 있음. 최근 정부가 정식문서 제출 시기를 '이르면 이달중'에서 '금년 중'로 조정한 것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 실제 CLCS에 정식문서를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물밑 협력을 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옴.
- 중국이 예비정보 문서를 냈다는 점에서 정식문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만, CLCS 심사와 해양경계 획정은 별개로 당사국간 합의가 안되면 CLCS 심사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제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임. 한 외교 소식통은 8일 "한중이 CLCS 논의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우리 정부의 정식문서 제출



등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 한·일 관계

● 정부, 한일 군수지원협정 완전 중단키로(7/3)

- 정부는 현재 논의가 중단돼 있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협의를 완전 중단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3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문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 중지된 양국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이 협정 체결 논의를 완전히 중단하는 방향으로 관련부처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없던 일로 귀결될 전망이다.
- 한일 양국은 그간 각각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초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가서명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국방부 초안과 일본 방위성의 초안이 몇 차례 교환되었으나 문구 수정 등 협의할 사항이 많아 공동 초안까지는 작성되지 않았다"면서 "공동 초안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측 실무자 간의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일본 측과 가서명됐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음.
- 국방부가 만든 상호군수지원협정 초안에는 협력의 범위를 유엔평화유지(PKO) 활동 등 국외로 명시하고 분야도 비전투 부문에 한정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경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이 소식통은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일본 군사화를 막아왔던 빗장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日관방장관 "한국,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 안된다"(7/6)

- 일본이 한국의 대륙붕 연장 추진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6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 추진과 관련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장관은 "한국이 일본의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 연장은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의 대륙붕 연장에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한국 정부가 유엔에 대륙붕 연장과 관련한 공식문서를 제출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이 첨예화할 것으로 보임.
- 일본 언론도 한국의 대륙붕 경계 확장 움직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이 대륙붕 확장을 통해 천연가스 등의 개발권을 확보하



려는 것이지만 일본과 중국의 대륙붕과 해역이 겹쳐 향후 한중일 외교 마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음.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해양 진출에 적극적인 중국의 움직임을 의식해 동중국해에서의 자원 획득 경쟁에 이름을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한국 정부는 한중일 3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이르면 이달 중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할 예정임. 정부의 정식 문서에는 기존의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확장을 추진하는 대륙붕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한일공동개발구역(JDZ)내 수역으로 면적은 총 1만9천km²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잇단 악재로 흔들리는 한일관계>(7/6)

- 한일 관계가 잇단 악재로 빠그덕거리고 있음.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처리 파문에 이어 일본 일각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을 둘러싼 입장차 등으로 인해 양국 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임. 정부는 당초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면서 '과거사 문제와 협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지만 현실은 달랐음. 특히 일본 정부가 협정 체결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원자력 관련법 개정으로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투트랙 접근법'은 거센 역풍을 맞았음.
- 이어 지난 5일에는 일본 일각에서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대일(對日)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음.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공식 반응을 자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기특이나 반일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의 적극적 무력행사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불거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임
- 이에 더해 6일에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정부는 한·중·일 3국 간 논란을 빚은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해 한국의 공식 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이르면 이달 중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었음. 문서에는 기존의 입장대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의 해양권역을 침해하는 200해리를 초과하는 한국의 대륙붕 연장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음. 한국 정부가 정식 문서 제출을 강행할 경우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임. 실제로 우리 정부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문서 제출 시점을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중국해 대륙붕 연장은 우리 정부가 2009년부터 밝혀온 입장"이라면



서도 "현 상황에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제출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음. 여기에는 국내 반일정서가 극도로 민감해진 상황에서 동중국해 대륙붕 문제로 일본과 갈등을 빚을 경우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재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이달 중'으로 못박았던 정식문서 제출 시기를 '금년 중'으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임.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도 발간할 예정이어서 한일관계는 당분간 먹구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 <‘밀실처리’ 논란 한일정보협정 추진 전말>(7/6)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정보협정) 처리를 둘러싼 사태는 이를 처리한 일부 관련자들의 안이한 판단이 부른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음. 청와대가 6일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정보협정을 올리는 과정에서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고, 사전·사후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을 만큼 엉성했음.

◇국무회의의 비공개 안건 추진 배경 = '6월 말 서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서두른 게 화근이었음. 정상적 절차라면 6월21일 차관회의를 거쳐야 했지만 일본 측의 문안 관련 최종 회신이 21일해야 도착했고, 법제처의 심의 결과도 22일 나왔음. 국무회의가 열리는 22일이 돼야 협정의 문구가 완성된 것임. 물리적으로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해졌고, 국무회의에 직접 올리는 수밖에 없었음. 이때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교통상부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생각해 낸 게 '즉석 안건' 상정이었음. 협정 관련 긴급한 사안인 경우 처리하는 전례를 따른 것임. 앞서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는 일본 측과 29일 정보협정 서명 사실을 공개하고 그전까지는 비공개로 진행기로 했다고 함. 29일 각의를 비롯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일본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음.

◇상관도 모르게 진행 = 워낙 다급하고, '은밀'하게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었음. 더욱이 상관에게도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당시 순방 중이었던 이명박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는 수준의 보고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차관회의가 생략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외교부에서 일을 맡은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외교부 1차관에게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음. 당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도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와 언론 등 국민에게 협정의 성격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설명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었음. 박 대변인은 "급박하게 상정할 게 아니라 일본과 협의해서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했다"면서 "또 외교 관례를 들어 일본의 국내 절차 완료 때까지 비공개로 할 게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했다"고 말했다.

라. 미·일 관계

● <美, 일본 '집단지위권' 논란에 '거리두기'(7/6)>

-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일본 총리 직속 정부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집단지위권' 행사 허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음.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사안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받자 "그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에 문의해보라"고만 답했음. 외교가에서는 미국 정부의 '거리두기' 행보를 충분히 예상했다는 반응임. 최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미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번 일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더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음.
- 하지만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한국과 중국 등의 내부 반발 움직임 등은 현지 미국대사관을 통해 보고받으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전략을 추진하면서까지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 국면에 접어드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을 것으로 보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정서를 안고 있는 한일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실감한 미국 정부가 향후 보다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일 동맹의 실질적 강화를 추진하는 미국내 기류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미국 의회내에서는 심지어 '미국이 기초한 일본헌법이 집단적 자위 참가를 금지한다는 해석으로 인해 미일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에 걸림돌이 된다'는 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황임.

● 美 클린턴 국무 "수직이착륙기 예정대로 日 배치"(7/8)

-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잇따른 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병대의 신형 수직이착륙기(MV22 오스프리)를 예정대로 일본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도쿄를 방문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8일 오후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신형 수직이착륙기 수송기가 동아시아 안전보장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전반적으로 수직이착륙기의 안전성은 양호하다"고 지적하고 "오키나와에 배치되면 일본의 방위에 공헌하고, 인도적 지원이나 재해 대책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수직이착륙기의 추락 사고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일본에 전달하겠다"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약속했음.
- 겐바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수직이착륙기의 추락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음. 미국은 일본에 배치하기로 한 수직이착륙기 24대 가운데 12대를 이달 중 야마구치(山口)현의 이와쿠니(岩



國) 기지에 배치할 방침임. 미 해병대는 이와쿠니 기지에서 수직이착륙기의 시험 비행을 거쳐 다음달 오키나와(沖繩)의 후텐마(普天間) 기지에 배치할 예정임.

- 하지만, 야마구치현과 오키나와현은 사고 빈발을 들어 미국의 수직이착륙기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미 해병대의 신형 수직이착륙기는 지난 4월 모로코에서 추락사고가 났고, 이달 13일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추락했음. 양국 외교장관은 동맹 심화와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을 착실하게 실천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음. 주일 미군 후텐마 기지를 같은 오키나와 내 나고시 헤노코로 옮기는 것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하기로 했음.

마. 중·일 관계

● 대만 어선·해경 순시선, 센카쿠 열도에 접근(7/4)

- 대만 선박이 센카쿠(대만명 다포위타이<釣魚台>) 열도 주변에 나타나자 일본이 발끈했음.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센카쿠 열도에 속한 우오쓰리지마(魚釣島) 서남서쪽 약 1.5km 지점에 대만 시민단체 활동가 3명 등 9명을 실은 어선 '취안자푸(全家福)'가 접근했음. 대만 해안순방서(해경) 순시선 5척도 어선의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로 동행했음. 본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영해"라며 퇴거를 요구했고, 어선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대만 측은 이를 거부했음. 대만 선박은 이날 정오께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을 벗어났음.
- 일본은 대만 교섭 창구인 '교류협회 타이베이 사무소'를 통해 대만 동아시아 관계협회에 항의했음. 하지만 대만 외교부는 "다오위타이 열도의 주권은 중화민국(대만)에 있다"며 "일본교류협회가 대만 외교부 산하 동아시아관계협회에 제기한 항의를 거부한다"고 맞섰음.

● <中, 日 '집단 자위권'에 즉각 반응없이 '靜中動'>(7/5)

- 일본 총리 직속 정부위원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건의한 데 대해 중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음. 일단 겉으로는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인 것으로 점쳐짐. 5일 오후 NHK 보도를 계기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급속히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은 지나칠 정도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 중국 정부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신화통신 등 주류 관영 매체는 이날 밤 9시 무렵까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관련한 소식을 전혀 전하지 않았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침묵을 지키는 것을 두고 사안의 파장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당국이 대응 방향을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중국 언론들은 선전 당국의 '보도 지침'이 나오기 전에는 민감한 외교적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내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 관영·준관영 매체의 보도를 필두로 중국 언론 매체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추진 동향을 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중국도 난징대학살과 같이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직접 겪은 나라라는 점에서 일본이 전수방위의 굴레를 벗어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보임. 더욱이 중국과 일본은 올해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고도 난징대학살에 대한 역사적 평가 문제를 두고 날선 대립을 해왔다는 점에서 군국주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더욱 부정적일 것이라 지적이 나옴. 아울러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회복이 미·일 동맹의 실질적 강화로 이어져 미국의 대(對)중국 포위 전략을 한층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임.
-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것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발전할 것을 경계하던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국가전략상 수수방관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분석도 있음. 중국 정부는 6일 오후 열리는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동향에 대한 공식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日 센카쿠 국유화 방침'에 中·臺 반발(7/7)

- 일본 정부가 중국 등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 제도를 국유화하기로 하자 중국·대만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다오위다오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는 불법이고 무효"라며 필요한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날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도 대만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의무이며 이 사안에 대해 "한 치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했음.
- 한편 이날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국유화 계획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평화롭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센카쿠 제도를) 유지·통제한다는 관점에서 이 사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계획을 인정했음. 앞서 전날 일본 정부가 센카쿠 제도 매입을 추진 중인 도쿄도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지사에게 정부의 센카쿠 매입 검토 방침을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음.

● 中, 日에 "중국땅 다오위다오 매매 말라"(7/8)

- 중국이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尖閣>)를 국유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7일 밤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자국의 신성한 영토인 다오위다오 매매를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류 대변인은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로, 중국은 쟁론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 법적인 근거가 있다"며 "그런 중국의 신성한 땅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결연히 반대할뿐더러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다오위다오 주권 수호 조치를 계속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음.

- 그의 이런 언급은 같은 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왔음.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센카쿠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는 관점에서 민간인 소유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센카쿠 국유화 의지를 공개했음. 일본 정부는 중국과의 오랜 분쟁 대상인 다오위다오의 5개 무인도 가운데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3곳의 매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 일·러 관계

● <러-日, 메드베데프 총리 쿠릴 방문 또 충돌>(7/3)

- 러시아와 일본이 3일(현지시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재차 방문한 사건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음.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날 항공기로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섬을 방문했음. 극동 지역을 방문 중인 메드베데프 총리는 사할린주(州) 주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기상 조건이 호전되기를 기다린 끝에 쿠릴 방문 의지를 관철했음. 지난 2010년 쿠나시르 방문에 이어 두 번째였음.

◇ 러-日 날선 설전 = 이에 일본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를 초치해 "쿠나시르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우리는 이 방문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며 "극도의 유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항의했음. 사사에 차관은 "이번 방문은 최근 양국 관계에 형성된 긍정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우리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거듭 지적했음.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일본 외무상도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나시르 방문은 일-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에 엄청난 양의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이에 러시아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베트남 외무장관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 열도 방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논평할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음. 그는 "러시아 정부 수장은 국가 영토를 순방 중이다"며 "이 방문 기간에 총리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쿠릴열도)의 조속한 사회경제적 복구 문제를 다뤘다"고 말했음. 그는 "일본 측 동료들도 우리의 이같은 입장을 잘 알고 있으며 (러-일)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한 접촉에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밝히고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라브로프는 그러면서 평화조약 체결



은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저항을 통해 실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깊이 있는 상호 협력 확대에 관한 합의를 실현하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러-日 관계 오랜 걸림돌 = 러시아와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2차대전 후 러시아가 차지한 쿠릴열도를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세계 제2차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이었던 지난 2010년 11월 역시 쿠릴열도의 쿠나시르를 방문한 바 있음. 당시 일본은 러시아의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쿠릴열도를 방문했다는 점을 중시,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후 양국 외교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음. 일본은 메드베데프의 대통령 재임 당시 쿠릴열도 4개 섬이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메드베데프는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영토인 만큼 일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자세로 일관했음. 한동안 갈등을 겪던 양국 관계는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과정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상당 정도 회복됐음. 특히 앞서 5월 취임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일본과 쿠릴열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음. 이처럼 우호적으로 진행되던 러시아와 일본 간 쿠릴열도 영유권 협상 분위기는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나시르 방문으로 또다시 얼어붙게 됐음.

● "러 미사일 탑재 폭격기 日 접근 비행"(7/5)

- 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의 폭격기가 지난달 말 일본 영공에 접근 비행을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북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군의 폭격기 4대가 6월 29일 홋카이도(北海道)와 도호쿠(東北) 등 일본 북부의 서해(한국의 동해안) 쪽에서 일본 영공에 접근해 위협 비행을 했다고 전했다. 일본 영공에 접근한 러시아 폭격기는 TU22기였으며, 일본 항공 자위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F18 전투기를 긴급 발진했음.
- 미사일을 탑재한 러시아 폭격기가 일본 영공 부근을 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지난 2일에는 러시아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등 26척이 함대를 이뤄 홋카이도 북단의 소야(宗谷)해협을 통과했음. 러시아군은 이번 주 말 오후츠크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러시아는 작년 9월 캄차카 반도 주변에서 1만명의 병력과 함정 50척, 항공기 50대 등이 참가한 군사훈련을 실시했었음.
- 일본 방위성은 올해 군사훈련 규모가 작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음. 일본은 지일파(知日派)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취임 이후 쿠릴열도



의 영유권 갈등으로 악화한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상황은 반대로 흐르고 있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3일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를 방문했음.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일러 관계의 전향적 분위기 구축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매우 유감이다"고 반발했음.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총리는 "일본이 뭐라 말해도 상관없다"면서 "(영토 문제와 관련) 일본과 무엇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냐. 러시아의 총리가 러시아의 영토에 가는 것을 일본과 논의해야 하느냐"고 불쾌감을 표시했음.

- 한편, 산케이신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지난달 멕시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영토 문제의 교섭을 재활성화하기로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회담 당시 '재활성화'라는 언급이 없었다고 보도했음. 푸틴 대통령은 당시 '영토 문제와 관련 외교 당국 간 논의토록 할 용의가 있다'고만 했으며, 노다 총리가 언론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졌다는 것임.

● 러, 쿠릴열도 방문관련 日항의 일축(7/6)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 방문을 둘러싼 일본의 항의를 묵살했음. 메드베데프 총리는 5일(현지시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정부 관료들이 쿠릴열도를 정기적으로 방문토록 하겠다고 말했음. 메드베데프 총리는 극동지역 방문 당시 기자들이 일본의 항의에 대해 질문하자 "대답하는 데 시간을 쓰고 싶지도 않다"며 "러시아 영토에 러시아 정상이 방문한 일을 왜 논의해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는 밝혔음.
- 메드베데프 총리는 지난 3일 일본이 역사적으로 자국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를 방문했음. 이에 일본 외무성은 주일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음.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히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세계 제2차대전 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해왔음.
-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이었던 지난 2010년에도 쿠나시르를 방문한 바 있음. 당시 일본은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최초로 쿠릴열도를 방문했다는 점을 중시,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후 양국 외교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었음.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쿠릴열도의 군 경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헬기항공모함의 해안 배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음.



사. 기. 타

● **中환구시보 "한일군사협정 막아야"(종합)(7/3)**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3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하 정보보호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한국은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일을 돕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나선 한국 정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음. 사설은 "협정은 한미, 미일 동맹이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가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며 "(한일의) 준 군사 동맹은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 전략적 함의를 갖는다"고 분석했음. 사설은 이어 한국 정부의 선택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한국의 장기 국가 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동북아에서 대국들 사이의 '최전선 바둑돌'로 전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은 또한 중국과 한국은 지금껏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명한 한국인이란 동북아에서 한국이 균형을 더욱 추구할 때만이 더욱 '조절자'로서의 힘을 갖는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설은 한국이 계속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최종적으로는 중국과 대립하는 위치에 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사설은 이어 한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화는 중국에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각종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압박해 협정 체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음.
-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이 일기 시작한 이후 중국 언론 매체가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환구시보는 상업지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가 발행한다는 점에서 준관영지로 분류됨. 언론 통제가 강한 중국에서는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기 곤란한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 환구시보 보도가 일종의 '정론'이나 '보도 지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잦음.
-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재차 피력했음.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대화와 협상만이 조선반도(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로 대립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반도의 정세가 복잡, 민감하므로 관련국들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도 같은 취지의 반응을 보였음.

● **제2회 '국제 의전장회의' 2014년 한국서 개최(7/7)**

- 미국 워싱턴DC에서 4~6일(현지시간) 열린 제1차 국제의전장회의에 참석한 세계 100여국 의전장들은 다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음. 각국 의전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등 세계적인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



이 풍부하고 의전 분야에서 국제적 모범이 되는 국가라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번 대회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배재현 외교통상부 의전장이 전했다.

- 국제의전장회의는 미국이 각국의 의전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와 외교에서의 의전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격년제 회의임. 배재현 의전장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개최한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경험을 발표했다. 그는 "오는 2014년 제2차 회의를 우리가 개최함으로써 '코리아 브랜드'를 국제사회에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만 "다오위다오 갈등, 中과 공조 고려안해"(7/8)

- 대만이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공조 가능성을 일축했음. 8일 영자지 타이베이 타임스 등에 따르면 양진텐(楊進添) 대만 외교부장은 현지 언론에 "다오위다오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화민국(대만)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독자적인 기본 원칙과 국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런 반응은 중국 학계에서 양안이 힘을 모아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된 뒤 나온 것임. 중국 학자들은 최근 "중국과 대만, 양안이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한다", "일본과의 영유권 갈등은 양안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등의 입장을 잇달아 피력했음. 중국 외교부도 지난 4일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태운 대만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다오위다오 근해에서 충돌한 사건에 대해 "대만 동포를 포함해 중국인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대만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음. 당시 대만 어선에 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기 대신 중국 오성홍기를 가져가 논란이 되기도 했음.
- 대만은 최근 다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음. 지난달 26일에는 해안순방서(해경) 순시선이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20여 분간 머물러 일본 측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음. 다오위다오는 대만 북단에서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진 곳에 있음. 이 섬은 주변에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게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